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가을호 | 2015년 11월 2일

발행인 유병우 회장
 편집인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 (개인택시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정기국회 통과’ 건의

연합회 회장단,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간담회 갖고 약속 받아내

우리 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을 국회로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월 9일 국철희 부회장을 비롯 4명의 부회장과 함께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서 김정훈 정책위원장, 강석훈 기획재정부 간사(서초을), 나석린 의원(부산진갑), 국토교통위 간사 김태원 의원(경기 교양시 덕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토론을 했다.

이날 유 회장은 택시와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 수송분담율도 37.4%로 버스와 대등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나석린, 신상진, 김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 면제 일몰기간이 연장되도록 건의했다.

이에 강석훈 기재위 간사, 나석린 의원



▲ 유병우 회장 등 협회 회장단은 9월 9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은 업계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연합회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나

현재 한정된 차종(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으로서는 승객의 요구를 충족불가하니 관광객, 단체승객 등의 서비스를 위해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을 건의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태원 의원은 국토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합택시 조기도입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유택시 도입에 대해서도 업계에서 건의한 문제점을 국회차원에서 긴급히 파악해 환경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환경전문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훈 정책위원장은 3개항의 현안문제는 자신이 직접 관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답했다.

끝으로 유병우 회장은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택시통행 허용을 건의하였다. 이어 김정훈 정책위원장은 중장기과제로 정부와 심도 있게 검토해 개인택시 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연합회에서는 부회장 국철희(서울조합 이사장), 부회장 박권수(부산조합 이사장), 부회장 조창영(경기조합 이사장), 부회장 서돌식(경북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신용대출보다 우대받는 오너드라이버 전용 대출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4000만원 + 0% + 최저금리 연 5.9% 수수료 0원

최고한도 4,000만원 최저금리 연 5.9% 수수료 0원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 ~ 최고 4,000만원
- 금리 : 최저 연 5.9%부터(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개월 중 선택 가능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 연체 이자율 : 19 ~ 29%(대출금리별 차등 적용)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한시적 적용으로 금리 변경 가능)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심사기준 완화)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상담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요망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교통의 시작입니다.”
 준법감시심의필 제150708-101043호(2015. 07. 09)

INTERVIEW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 김태원 의원

“택시 현안문제 해결 최선을 다할 터”

의원님께서서는 택시업계의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의 중책을 맡고 계시고 평소에도 택시업계에 대해 많은 걱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16만 4천 개인택시사업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택시업계는 IMF 당시보다 더한 사상최악의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각종규제, 콜밴화물자동차, 자기용대리운전 등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이 택시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동법률안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라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택시업계의 현안문제 중에서도 우선 시급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김태원 (경기 덕양 을) 의원은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개인택시에 공급하는 부가가치 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하려고 신상진, 나성린, 김관영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또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택시업계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A 개인택시는 전국에 16만대가 면허되어 여객수송을 담당하는 준 대중교통수단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과다, 수요감소, 연료인상 등의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어려움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개인택시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동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Q 택시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개발이 필요하나 11인승 이하로 한정된 차종으로는 관광객, 단체승객들의 요구에 불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인승 이하 승합차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택시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나 한정된 차종(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으로 관광객, 단체 승객 등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13인승 승합택시는 관광객, 단체승객, 농어촌승객 등 다양한 택시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대형택시 범위를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려다 농어촌버스 등 버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여 보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개최했고, 우선 대도시부터 도입하도록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6년부터 대형택시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부터 승합택시 도입 등 단계적으로 승합택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객법·택시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군지역을 제외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합택시가 도입되면 골프장 이용객, 집이 많은 관광객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택시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필요성이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버스,

택시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해 입장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16만 4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리고 의원님의 지역구인 고양시에도 약 2천여 개인택시사업자가 계십니다 이분들에게도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택시연료(LPG) 할당관세 지원 근거 마련, 승합택시 확대, 유가 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등 사업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께서도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 안전하고 친절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교통수단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국감 중계석

정성호 의원, ‘교통안전법 입법예고안 업계의견 존중해야’ 질의

국토부 ‘업계 의견 충분히 검토 후 법령 정비할 터’ 답변



▲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정성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택시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해오던 교통관련 국감 질의를 금년에도 이어나갔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 10월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중대사고 운전자 재취업시 교통안전체험교육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및 교통수단 안전 점검 결과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입법예고안(2015. 5. 1.) 등 택시를 비롯한 교통업계가 부담하게 될 불합리한 법률과 규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운전적성검사(특별검사)를 이미 교통안전공단에서 받고 있는 바, 이와 중첩되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이다.

체험교육센터는 경북 상주시 단 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고가의 교육수수료 (승용차 기준 기본과정 : 9만2000원, 심화과정 : 12만3000원) 부과와 교통비, 숙박비 등 최소 2일의 휴무 발생에 따른 운휴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임법률안은 지난 2009년 정부

와 관련 업계는 체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무적 교육방식 보다는 교육이수자에게 별점감소 등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교육으로 할 것을 관계 기간과 교통업계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사실을 상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대사고 발생운전자 재취업시 교통안전체험교육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규제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이에 국토부는 현재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등 법령 정비를 통한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교육 이수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토부도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우리 연합회는 법인택시연합회 및 관련 교통단체와 운전적성정밀검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체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금지 등을 중점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함께하기로 했다.

연합회 제 7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 개최

공제조합 신임 이사장 오홍렬(前 국토부 대중교통과) 선임

우리 연합회(회장 유병우)는 10월 22일 연합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유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금년 한해도 이사장님들의 노고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치하한 뒤 금년말까지 현안문제 해결에 일치단결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7인 중 15인이 참석하였으며, 중요안건으로는 제1호의안으로 "예산 및 회계처리규정 개정"에 관한건, 제2호의안으로 "공제조합이사장

선임"에 관한건을 진행하였다.

제1호 안건은 작년에 규정을 개정한 후 실질적 집행에 문제가 많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개정을 찬성, 선포하였으며, 제2호 의안, 공제조합 이사장 선임을 만장일치로 찬성 선포하였다.

한편 이날 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된 오홍렬 이사장은 58세로 강원도 흥천 출신이며 강원도 정선군청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서기관, 국토교통부 강원도 협력관 등 37여년간 공직을 수행하였다.



▲ 유병우 회장을 비롯 16개 사도이사장이 제 7회 이사회를 가졌다.

오 홍 렬 신임 공제조합 이사장



- 1977. 8 ~ 1986. 8 강원도 정선군청 (9~7급)
- 1988. 2 ~ 1992. 8 교통부 동해지방해난심판원 서기관 (7~6급)
- 1992. 8 ~ 1993. 2 교통부 육상교통국 차량과
- 1993. 2 ~ 1994. 12 교통부 총무과
- 1994. 12 ~ 1998. 3 건설교통부 총무과
- 1998. 3 ~ 2001.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

- 2001. 7 ~ 2002. 2 예산담당관실 (5급)
- 2002. 2 ~ 2003. 8 신공항기획단 기획총괄과
- 2003. 8 ~ 2004. 11 항공안전본부 기획총괄과
- 2004. 11 ~ 2005. 11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 2005. 11 ~ 2006. 11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2006. 11 ~ 2008. 3 기반시설본부 기반시설기획팀
- 2008. 3 ~ 2012. 1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4급)
- 2012. 2 ~ 2014. 5 국토교통부 강원도 협력관

현대카드M-개인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자동차생활카드



연회비
유류 국내전용 면제
일반 국내전용 5,000원(초년도 정상 부과, 차년도 이후 면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서비스

LPG 충전 시 리터당 239원 면세 및 보조금 혜택

- LPG 리터 측정 기준은 국토부, 국세청 기준
- 일 4회 한도
- 부제일 이용건, 1회 충전 한도량 72리터 초과 시 지급 거절
- 충전 회차 1시간 이하건 서비스 제공 불가
- 보조금 혜택 기준은 국토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SK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1% M포인트 적립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 현대·기아차 구매 시 30만원까지 선포인트 받아 사용하고 매달 M포인트로 상환하는 차량 구매 프로그램(만기 종료 시 잔액은 익월 일시 청구)

종합건강검진 우대서비스

- 예약 시 40~60% 할인
- 전국 130개 이상 건강검진센터 예약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홈페이지 내 상품 설명 및 약관 참고
- 카드 신청은 전국 시·도 조합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 카드 이용금액 연체 시 23.5~29.0%의 연체이자율 적용

M포인트 적립 및 사용

모든 가맹점에서 0.5~2% M포인트 적립

- 세이브-오토(선지급 포인트 서비스) 및 신차 구매 시 별도 적립률 적용 (세이브-오토 이용 시 1,000원당 20 M포인트 적립)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연회비, 제수수로, 이자, 지방세·국세 등 세금 납부액, 도시가스 요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납부 결제건, 자동납부서비스 이용수수료, 당사의 모든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적립 제외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 시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 보유하고 있는 현대카드 포인트를 통합하여 1인당 5년간 200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
- M포인트+세이브-오토 포인트+통장포인트+가족 M포인트+5카드 오토 포인트 +BLNEmembers 포인트 통합 한도
- M포인트 사용은 구매 이전에 적립된 M포인트에 한하며, 해당 차량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불가
- BLNEmembers 포인트는 현대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
- KIA RED MEMBERS 포인트(구 Qmembers 포인트)는 기아차 구매 시 사용 가능하며, 통합 한도에 포함되지 않음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준법감시심의회 제150623-150119호 (2015.07.01)

우리조합 NEWS

부산조합, 택시 제도 개선과 발전방안 현장 세미나 열어

현행 택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



▲ 부산조합 대강당에서 1천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택시 제도 개선 발전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 부산행복연구원 나성린 원장 일행에게 택시업계의 현안을 설명하는 박권수 이사장.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은 10월 14일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정책연구소인 부산행복연구원 원장인 나성린 의원을 초청 부산개인택시조합 대강당에서 '택시제도 개선 방안'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택시업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서용교·하태경 국회의원과 김유인 국토교통부 택시팀장, 박진옥 부산시 대중교통과장과 박권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및 개인택시사업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합원과 함께 열린 이날 세미나에

서 ▲ 개인택시 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기한 연장 ▲ 택시 감차에 따른 업계 출연금 부담 완화 ▲ 경유택시 도입 ▲ 승합택시 도입 등을 국회가 앞장서서 적극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유인 택시팀장, 박진옥

대중교통과장, 최양원 영산대 교수 등이 나서 현행 택시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산행복연구원은 세미나 개최에 앞서 박권수 이사장으로부터 개인택시업계의 현황과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차량 일제점검 실시

서돌식 이사장 현장 방문·조합원과 민원 해결

경북 조합은 하반기 차량일제점검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4일간 실시하고 있다.

차량일제점검사시에는 개인택시차량의 청결상태와 함께 지역표시 및 부제표시, 고통불편신고 스티커 부착 등의 행정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복장 상태를 확인해 깨끗하고 청결한 개인택시의 모습으로 승객을 맞이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도단위의 특성상 각 사군으로 광범위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평소 조합원들의 조합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합원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불가능하여 서 이사장은 평소에도 수시로 지역을 찾아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특히 차량일제점검 시기에는 한지역도 빠짐없이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지역의 실정을 듣고 개인택시업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서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수렴하여 조합운영에 반영하고 조합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경북도 조합은 차량일제점검 시기에 맞춰서 조합회보를 발간하여 조합원 개개인에게 전달하고 개인택시업계와 관련된 법령 개정 및 각종 현황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서 이사장은 공제직원들에게도 업무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 차량일제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하여 점검장에서 교통안전과 관련한 홍보전단지 배부와 홍보활동 등의 캠페인도 함께 전개하고 있으며 공제와 관련된 각종 민원에 대해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



▲ 일제점검 현장에서 차량 내부 청결 상태까지 꼼꼼히 점검하는 서돌식 이사장

하고 있다.

경북조합은 조합원들의 안전점검을 위해 현대·기아 및 삼성 자동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센터의 점검을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차량을 현장에서 정비상태

를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들도 차량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 윈도우브러쉬 및 워셔액 등의 소모물품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원조합 강릉·속초 지부 새누리당 권성동, 정문헌 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

강원조합 강릉지부와 속초지부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택시 업계 현안 문제를 토의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9월 13일 강원조합 김주원 이사장과 김병일 강릉지부장은 강릉지부 운영의 원과 함께 이지역 출신 권성동 의원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정문헌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는 김주원 이사장과 김병일 강릉지부장.

이날 간담회에서 김병일 지부장은 ▲ 차량구입 부가세 면제와 ▲ 불법 여객



▲ 권성동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는 속초, 고성, 양양지부장.

영업 단속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요청했다.

또한 10월 8일 최정수 속초지부장, 지창은 고성지부장, 김동백 양양지부장과 함께 정문헌 의원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조세 제한 특례법 일몰기한 연장 및 연료부가세 면제 등에 관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권성동 의원과 정문헌 의원은 “택시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택시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15 광주 U대회 성공적 개최 개인택시가 앞장서

광주시 개인택시조합에서 2015 광주하계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4800여 조합원들의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외국인 통역서비스 홍보 안내문 부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했기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다.

특히 수송과 관련하여 광주시조합과 U대회조직위는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택시 조합원 600여명이 수송위원으로 결합하여 광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안전하고 친절의 수송 업무를 담당했기에 광주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었다. 광주시민들은 광주개인택시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더욱 빛나는 대회가 될 수 있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2015광주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한달여 기간 동안 광주하계 U대회 전후로 수송업무를 책임지며 더운 여름날씨에도 경기장을 돌며 선수들과 각국의 취재진들을 안내하느라 연일 땀방울을

흘리며 묵묵하게 대회를 위해 힘써준 조합원들과 스티커를 비롯한 안내문 부착에 함께해주신 모든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빛났다.



▲ U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하는 김문옥 이사장.



▲ 광주시장과 함께 U대회 홍보스티커 부착 중인 김문옥 이사장.

광주에서 시작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김현웅 법무부장관, 광주조합 김문옥 이사장 등 시민 단체 참가



▲ 배려교통문화 선포식에 참여한 김문옥 이사장.

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광주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이 시작됐다.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와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 지역연합회는 지난 10월 2일 오후 광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일환으로 마련된 선포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김희관 광주 고등검찰청 검사장, 김해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장휘국 광주교육감, 우리조합 김문옥 이사장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됐다.

선포식은 김 장관의 대회사·결의문 낭독·주요 기관장의 실천 서명식·홍보대사 위촉·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홍보대사에는 개그맨 남희석과 영화배우 서우가 위촉됐다.

먼저 교통종사자 대표가 10개 실천항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김 장관을 비롯한 30개 기관단체장이 대형플라카드에 실천운동 적극 참여를 다짐하는 서명했다.

김 장관은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방식으로

시도되는 SOS(시작해요 나부터·오늘부터 지금·서로 배려를 다같이)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 1호 참가자로 나섰다.

광주예술고 학생들이 고안한 안무를 함께 하며 이를 촬영해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전용 페이스북에 올린 뒤 다음 참가자로 김희관 광주고검장과 김해수 광주지검장을 지목했다.

참가자로 지명된 사람들은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페이스북에 학생들의 안무를 따라한 모습을 촬영해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배려 교통문화 실천으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하고 대형차가 소형차를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주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인천조합을 가다

복지타운 건립 적극적으로 추진

김승일 이사장, 투명하고 화합하는 조합으로 변화할 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향도 인천조합이 투명하고 화합하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찬 몸짓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조합은 정관 24조의 애매한 해석 때문에 총회 결의와 대의원 결의의 법률적 효력 다툼으로 오랫동안 조합과 조합원 간에 소송 등으로 소모적 분쟁을 겪으면서 9천여 조합원의 복지조합 향상은 답보 상태로 정지 상태에 있었다. 또한 소송비 등으로 막대한 조합비가 지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다.

제 11대 김민환 이사장의 사고사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나타난 김승일 이사장은 취임하자 곧바로 소모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관개정에 착수했다.

◆ 조합원이 참여하는 정관개정

현재의 정관은 1983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대의원총회가 조합원총회를 갈음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 정관이 일부 조합원이 대의원총회 결의를 조합원총회로 대신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합은 조합원과 정관 24조의 해석을 놓고 재판을 하는 분열이 형성됐다.

김승일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 대한 애매한 법률적 해석을 차단,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도하는 정관 개정 추진해 나갔다. 지난 7월 22일에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개정을 의결했고 7월 30일에는 대의원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쳐 모바일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승인을 받았다.

또 8월 20일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 모바일 여론조사 방법을 심의했고 9월 22일 대의원회의에서는 정관개정 관리위원과 정관개정 투·개표위원을 선출, 철저하고 신

속하게 민주적 절차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정관개정은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사회나 대의원이 주체가 돼 조합원 뜻을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법률해석이 확실한 정관개정이 되면 조합은 일부 조합원과의 대립을 청산, 함께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승일 이사장은 정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복지타운 추진

“9000여 조합원을 위한 복지 타운은 김민환 전이사장의 유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조합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1987년에 건축된 현 사옥은 낡은 건물이기도 하지만 주차장이 협소한데다 공장지대에 있어 조합원이 찾아 오기도 불편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여간 불편합니다. 또한 공제지부가 별도로 있어 조합원들이 조합업무와 공제업무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타운 건설을 이사장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사장 임기가 잔여 기간동안이라 짧지만 ‘시작이 절반’이라는 속담을 믿고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취임인사차 6월 26일 인천시청을 방문, 유정복 시장을 면담하고 개인택시 복지타운 부지 지원 요청을 했다. 또한 후보지가 있는 서구청을 찾아 강범석 구청장을 만나서도 인천조합의 복지타운 건설 필요성을 설명하고 복지타운 건축부지 매입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는 등 썬 값에 시유지를 확보하려는 첫발을 떴다.

김 이사장이 그리는 복지 타운 청사진은 3000여평의 대지에 사무실, 정비공장, 직영충전소를 갖추어 조합과

공제지부가 한 건물에 입주, 조합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체력단련과 휴식을 누리는 공간도 확보, 명실공히 복지가 넘치게 하겠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유정복 시장으로부터 김 이사장의 건의를 면밀히 검토해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니 남은 임기 동안에 꾸준하게 요청하겠다”고 김 이사장은 복지타운에 대한 신념을 밝힌다.

◆ 택시 요금 인상 추진

인천조합은 택시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지역실정에 맞게 택시요금을 조정한다는 원칙대로 2015년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 법인 택시와 함께 요금인상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올 중에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 이사장은 현행 시외할증료 20%를 현실화해 40%로 인상도 택시 요금 인상 때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경우 서울, 부천, 시흥, 김포 등과 인접해 있어 시외운행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20%의 낮은 할증료로는 시외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외할증료를 현실에 맞게 40%로 인상해 주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야간 할증료 적용 시간도 6시 퇴근 후면 특근 수당을 받는 공무원들과 같이 오후 6시로 적용 시간 변경을 추진한다.

◆ 승강장 증설 추진

인천 시내에는 택시 승강장이 크게 모자라 조합원들이 마음놓고 주차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주차로 단속돼 과태료를 물기까지 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29개역 중 정류장이 있는 곳은 6개소 밖에 없다.

경인지하철 1호선도 11개역 중에 6개소에 정류장이 있어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인천조합은 턱없이 부족한 택시 승강장을 늘려 조합원들의 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장과 이사, 대의원이 관내 5개 구청을 방문, 구청장을 면담하고 택시 승강장 증설을 건의했다.

이와같은 인천조합의 건의를 받은 구청장들은 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부족한 승강장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 역동적인 공제 운영

“대부분의 공제 지부가 적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

습니다. 그중 우리 공제 지부도 적자운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지부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합과 공제지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일 공제지부장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사고율을 줄이는 한편 지부도 사고 처리하는 현장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대폭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현장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하도록 기동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차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 직원이 상대 직원보다 일선 현장에 도착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신속한 사고보상처리가 이뤄지도록 노력, 보상금 지급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동일한 케이스 사고 일때는 사고보상금을 최저 지급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직원간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적자 공제를 지양하는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라고 김승일 지부장은 말한다. (글·김관술)

| 인천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남동구 김세영 이사



중동구 강상현 이사



남구 이재호 이사



남구 변창구 이사



연수구 이형선 이사



남동구 유영철 이사



부평구 김재두 이사



부평구 오차식 이사



계양구 심병호 이사



서구 서권일 이사



중동구 김홍근 이사



남구 박종선 이사



남구 박한규 대의원



남구 김성남 대의원



남구 이주한 대의원



남구 유영갑 대의원



연수구 신운식 대의원



연수구 주용식 대의원



남동구 최상철 대의원



남동구 성기덕 대의원



부평구 김종근 대의원



부평구 남현희 대의원



부평구 김영국 대의원



부평구 이진우 대의원



계양구 김일두 대의원



서구 조구환 대의원



강화군 김종민 대의원



계양구 정종섭 대의원



서구 하광섭 대의원



계양구 최한중 대의원



남동구 최동일 대의원



남동구 이대영 대의원



서구 최광한 대의원



남동구 윤재영 대의원



연수구 박종기 대의원



서구 장래철 대의원



충북조합을 가다

시골 행복택시 발대식 갖고 오지 마을로 Go-Go

11개 지부 중 8개 지부 자체 소유 사옥 마련

개인 택시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택시사업조합은 조합의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과 시·군 지부의 지부장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구조여서 조합원의 대립과 반목이 상존한다. 그런데도 충북조합은 조합원은 조합을 신뢰하고 조합은 모든 역량을 집중 조합원의 업권 신장 노력으로 신뢰에 보답한다. 조합과 조합원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충북조합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있다.

◆ 조합 화합에 역량 집중

충북조합 최현태 이사장은 제 7대 이사장에서 제 11대까지 다섯번의 선거를 치뤄 당선되는 과정을 겪어내면서도 조합이 조합원의 반대에 발목잡히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한다.

“물론 우리조합 조합원이 4408명이 되는데 모두 최현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지요. 저는 반대하는 조합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의 목소리에 담겨있는 비난을 건의로 받아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리다보니 반대조합원이나 선거의 경쟁자들은 선거가 끝나면 오히려 화합에 앞장서고 조합발전에 참여합니다.” 다섯차례나 선거를 치르면서도 한번도 실패하지 않고 당선할 수 있었던 것은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조합 발전을 일궈낼 수 없다라는 신념 때문이라고 최 이사장은 말한다.

충북도 조합은 2010년 낡은 사옥에서 탈출, 새사옥으로 옮기는데 반대 조합원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 조합원들은 반대를 하면서도 새사옥 건축을 못하게 발목을 잡는 방해를 하지 않은 현명함 때문에 새사옥으로 옮길 수 있었다.

또한 충북도 조합이 화합조합으로 탄생할 수 있는 원동력은 수평적이고 진정성있는 최 이사장의 리더십과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칭찬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 이사장은 2007년부터 장기 무사고 운행으로 공제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을 선발, 올해까지 1114명의 조합원에게 금뱃지를 달아주고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었다.

4408명의 조합원 중 25%가 넘는 조합원이 우수조합원으로 뽑혀 금뱃지를 달았다. 이같은 칭찬으로 조합원은 조합화합에 앞장서고 무사고 운전애 노력했다.

◆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충북조합은 도청, 시청, 군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괴산군에서 개최되었던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홍보 협약을 체결 전 조합원이 홍보를 펼치고 지원을 했다.

“괴산군에서 개최된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아 거도적으로 추진하는 세계적인 행사여서 우리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 조합원이 노력하셔서 도청은 물론 11개 시·군청과도 서로 협조하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조합과 시·군지부는 그동안 영상기록장치, 디지털운행기록계 브랜드 택시 등을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재정 지원을 요청해야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노력으로 협조하여 형성되는 돈독한 유대강화는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합니다” 최 이사장은 도청·시청·군청과의 유대강화 필요성을 설명한다.

◆ 시·군지부 역량강화

도조합과 시군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 도 조합은 시·군지부의 업무 처리 역량 확대를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충북조합 최현태 이사장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 이사장은 조합운영의 주체인 대의원과 함께 해마다 선진지부 시찰을 통해 대의원이 조합 경영 능력을 체험하도록하여 지부 경영에 스며들게 한다.

또한 최 이사장은 청주시지부를 비롯한 11개 지부가 자체 사무실을 갖도록 지원하고 독려한다. ▲ 충주 ▲ 제천 ▲ 보은 ▲ 영동 ▲ 음성 ▲ 진천 등 6개 지부가 자체 사무실을 건축하거나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 괴산 ▲ 단양 지부도 부지를 매입, 사무실을 건축하고 있어 올해 안에 자가사무실을 갖게 된다.

충북도조합 산하 11개 지부 중 8개 지부가 자체 사무실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부도 머지않아 자체 사무실을 갖게 되면 도조합을 비롯 11개 지부가 모두 자체 소유 사무실을 갖는 눈부신 발전을 한다.

또한 11개 지부 중 조합원이 2540명으로 도조합원 4408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청주시 지부는 1999년부터 청주시 남부지역에 복지충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 지부는 지역적인 여건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 조합원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 중심부에 내년 개업 목표로 복지충전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669명으로 청주시 다음인 충주지부와 조합원 455명으로 3위인 제천지부는 직영충전소 꿈을 간직한 채 각각 차량정비센터를 운영, 조합원들의 차량 수리 편의를 제공한다.

청주지부는 복지충전소 운영과는 별도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을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11



▲ 이시종 도지사, 최현태 이사장이 보은군수 군대 교통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골마을 행복택시발대식을 갖고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개 지부가 나름대로 업무영역을 넓혀 가면서 복지조합의 희망을 키워간다.

◆ 공약사업 추진

최이사장은 제 11대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 행복택시 운영 ▲ 모바일 광고 택시 추진 ▲ 노후영상기록장치 교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중 모바일 광고 택시는 내년 상반기 중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노후영상기록장치도 충북도청과 교체 협이가 끝나 2016년 1월 중에는 설치가 완료되어 조합원들의 안전운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 조합원들의 운송수입 증가를 목표로 추진했던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큰 성과를 얻고 있다.

최 이사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이시종 도지사와 담판을 벌여 즉석에서 승낙을 받아낸 사업이어서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부터 보은군 회인면 갈타리 마을회관에 이시종 도지사, 보은군수, 도 및 시·군 의원과 관내 군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 충북도 내 11개 시·군 중 괴산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오지마을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만 내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행복택시는 100개 마을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다. 택시 요금의

손실금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는 행복택시는 개인택시 154대, 법인 택시 47개가 참가하고 있는데 연차별로 확대, 오는 2018년까지 충북도내 184개 전체 오지 마을에서 운행된다.

◆ 독특한 공제문화

충북 공제지부는 충북교통단체와 교통연수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캠페인을 벌인다.

1년에 다섯차례 합동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교통연수원 자체로도 21회 캠페인을 실시하는 충북조합은 무사고운전을 장려하는 독특한 공제문화를 갖고 있다.

최 이사장은 해마다 10년이상 장기무사고 조합원을 선발, 무사고 인증서와 부상으로 순금 1돈짜리 배지를 만들어 시상한다.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까지 9회에 걸쳐 1114명 조합원이 시상을 받을 정도로 유공조합원 시상문화는 무사고운전으로 공제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으므로 사고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글·김관술)



▲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현태 이사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유기농대회 전단을 개인택시에 붙이고 있다.

| 충북조합 발전을 이끄는 임원진



유인종 전무



이시우 공제부지부장



이영재 감사



신인후 감사



박종택 이사
청주시지부장



고영수 이사
충주시지부장



양주석 이사
제천시지부장



김도수 이사



전일규 이사



이우규 이사



김봉용 이사
영동군지부장



신강진 이사
증평군지부장



이상호 이사



김용완 진천구지부장



김병순 옥천군지부장



김병복 괴산군지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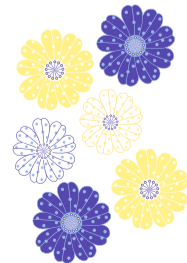
최병길 음성군지부장



이한필 단양군지부장



조성래 보은군지부장



2015년 3/4분기 주요 사업 추진실적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 (택시 콜서비스 재정지원 근거 마련)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15. 05. 11)에 대한 수정안이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15. 06. 17) 및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통과('15. 06. 18), 제33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15. 06. 18)하여 공포('15. 08. 11)하였으며,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이용 승객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출설비를 갖춘 택시에 대하여 택시호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및 동 서비스에 따른 통신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음.
- ▲ 그러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음.
- ▲ 이 경우 택시업계는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이용 승객에게 지원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할 것임.
-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택시호출서비스 수수료 등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택시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20년 이내로)

국토교통부는 자율감차 전국확대 시행('15.7월)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 할 수 있도록 감차기간을 완화하고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5. 05. 19)를 거쳐 공포('15. 09. 01)하였으며,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사업구역마다 상이한 감차규모 및 감차보상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맞는 감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 감차보상의 사업구역별 시행기간을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공포 (고급택시 운임·요금 자율신고제 도입)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관광객 및 해외 바이어 등에게 차별화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운임·요금을 정하여 시·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범위에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15. 04. 09)를 거쳐 공포('15. 09. 15)하였으며,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제7조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	제7조(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와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자 2.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고급형으로 구분된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제4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고급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 및 설비 설치의무 완화 등)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등 자동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고급형 택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시 및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15. 04. 09)를 거쳐 공포('15. 09. 21)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기준 변경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고려하여 배기량만으로 구분하던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배기량 또는 차량의 크기로 구분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대형화 및 연료 효율 증가 등을 고려하여 고급형 택시의 배기량을 3,000시 씨 이상에서 2,800시 씨 이상으로 변경함.
- ▲ 고급형 택시의 표시 의무 등 완화
고급형 택시의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자동차의 바깥쪽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자동차 종류, 관할관청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호출설비 및 요금미터기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같은 호 라목 후단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형: 배기량 1,000시 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소형: 배기량 1,600시 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 ----- ----- -.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시 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시 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현 행	개 정
3. 중형: 배기량 1,600시 씨 이상의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시 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고급형: 배기량 3,000시씨 이상의 승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 2,800시씨 -----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고급형은 제외한다)----- 가. ----- -----, “모범”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 ----- ----- -----계시(고급형 택시의 경우에는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계시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1. (생략)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① 법 제17조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4 제1호나목2(마)에 따라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 마.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고급형은 제외한다)----- 가. ----- -----, “모범”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6. (생략) ② (생략)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 ----- ----- -----계시(고급형 택시의 경우에는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계시를 포함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가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주었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의원 등 11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11인) (2015. 08. 21)	▲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 공급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경기침체에 따른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큰 실정임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10인) (2015. 09. 25)	▲ 개인택시운송사업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적극 대응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 확대 관련)

국토교통부는 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 산업단지 등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운송사업 경영 개선 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5. 07. 03)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 확대	학원 및 체육시설 등의 시설에서 통학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산업단지 운행 전세버스 지정 권한 확대	전세버스를 통근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당연합회를 비롯하여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 등 4단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5. 04. 09) 내용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범위를 학원, 체육시설까지 확대”할 경우 문화시설, 생활시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세버스 이용자에 대하여 탑승객 통제가 불가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여객운송질서가 무너질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운행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재량권 확대로 구역여객운송사업인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허용 난발 등에 예상되어 현행유지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15. 07. 20)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사업 범위 확대 반대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 ----- ----- -----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생략)	1. (생략)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생략) 1) (생략) 2) 회사·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생략) 1) (생략) 2) 회사·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 정 안	수 정 안
<p>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p> <p>3) (생략)</p> <p>나~라. (생략)</p>	<p>3) (생략)</p> <p>나~라. (생략)</p>

- 현황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전세버스운송 사업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행계통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회사·학교 또는 어린이집, 산업단지 등
 - 입법예고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전세버스의 영업범위를 확대

- 문제점
- (통학차량 안전강화 역행)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2015년 7월 28일부터 신고의무화 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범위를 학원, 체육시설까지 확대 하는 것은 불법셔틀버스 운행 증가로 이어져 통학차량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역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계 혼란 가중) 학원, 체육시설까지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범위를 확대 할 경우 이후에는 문화시설, 생활시설,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까지 확대될 것이 자명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근본 체계 무너짐
 -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 학원, 체육시설의 전세버스 운행은 탑승자 통제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공수단인 시내버스 및 택시업계의 사업성 악화로 사회문제화 될 우려

- 의견
- 따라서 전세버스의 예외적인 사업범위를 현행과 같이 회사·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

2. 산업단지 운행 전세버스 지정 권한 확대 반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p> <p>1. (생략)</p> <p>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p> <p>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p> <p>나~라. (생략)</p>	<p>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p> <p>-----</p> <p>-----</p> <p>-----</p> <p>-----</p> <p>-----</p> <p>1. (생략)</p> <p>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p> <p>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p> <p>-----</p> <p>-----<u>국토교통부장관이</u>-----</p> <p>-----</p> <p>-----</p> <p>-----</p> <p>---</p> <p>나~라. (생략)</p>

-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 문제점
-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초래)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은 버스·택시업계의 반대

- 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 9개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 26개 산업단지, 2014년 12월 34개 산업단지까지 확대
 - (사실상의 규제 폐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산업단지에 이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여객운송사업 간의 분란 초래) 구역여객운송사업인 전세버스 도입 취지와 상치될 뿐만 아니라 통근·통학용으로 만연해 있는 전세버스의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고 이를 확대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의 증가를 방지할 수 없고,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버스업계의 영업권 침해로 업계 간 분쟁은 물론 여객운송사업의 업역구분 붕괴 초래
 - (안전상의 문제 야기) 전세버스는 대부분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택시·버스 등에 비해 차량관리 등에 소홀하여 대형교통사고와 인명사고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근버스 지정권한 확대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안전을 방지하는 결과 초래

- 의견
- 따라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현행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에 한정하되
 - 장기적으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산업단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8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확대에 적극 대응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의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337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5. 08. 12)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 ▲ 대리운전업체가 자동차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자동차임차인에 대한 운전자알선 금지대상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제외
- ▲ 법 제89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

당연합회를 비롯하여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 등 4단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중 “자가용 대리운전자는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배, 대리운전의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로 여객운송질서가 문란이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현행유지 강력히 건의(15. 09. 21)하였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현황 (입법예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

- 문제점
- (상위법 위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2항에서 누구든지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고, 다만, 외국인, 장애인 등에게는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조항에 위배됨.
 - 자동차대여사업자, 임차인 등 누구든지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34조제2항 단서 규정은 극히, 제한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음.

-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자가용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렌터카 임차인에 포함시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허용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함.

○ (형평성 문제) “자가용 대리운전자”를 렌터카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업종의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 대두됨.

○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 전국에서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영역이 만연되어 있고 현실에서 “자가용 대리운전자”를 렌터카 임차인에 포함시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할 경우 “자가용대리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여객운송행위 증가가 예상되고 여객운송질서가 문란해짐.

□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현행유지

개 정 안	건의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다.	제18조(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1. 외국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리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삭 제)	3. 65세 이상인 사람
4. (삭 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삭 제)	5.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6. (삭 제)	6.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7. (삭 제)	7.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뒷좌석안전띠 모든 도로에서 착용 의무화)

■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옆 좌석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경찰청 통계(2009년~2013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4년 기준 국내 승용차에서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78%, 뒷좌석은 9.4%로 현저히 낮

은 상태임.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4~98%, 뒷좌석은 74~9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국가들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의무화를 위하여 김상민의원 등 10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 (10인) (2015. 08. 06)	▲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안으로 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중 택시와 관련된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

정부발의 (2015. 10. 01)	▲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 취득세의 100분의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

11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간담회

■ 연합회는 연합회장단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간담회를 '15. 09. 09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개최하여 개인택시 당면 현안문제를 건의 하였으며, 그 추진사항 및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진사항

▲ 참석자 (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회장, 부회장 등 6인 (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김정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강석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나성린 위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
▲ 건의내용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일몰 기간 연장 -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승합택시(13인승 이하) 도입 적극 추진 - 경유택시 도입 적극 추진



추진결과

▲ 개인택시 차량 부가세 면제 일몰기간 연장 업계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발의안이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강석훈 기재위간사, 나성린위원 적극협조)
▲ 승합택시(13인승 이하) 도입 국토교통부에서 조기 도입 추진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음(김태원 국토위간사 적극협조)
▲ 경유택시 도입 업계에서 건의한 문제점을 긴급 파악하여 환경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배석)

공제경쟁력을 말한다

2015 개인택시공제조합 의료연수과정 수료

정신과·한 의학과·안과·치과·이비인후과 등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는 우리 공제조합을 포함한 5개 공제조합에서 선별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연수특과과정 교육이 실시되었다. 총 5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 우리 공제조합은 10명의 직원이 모든 교육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전원 교육 수료의 기쁨을 누렸다.

이번에 실시된 의료연수특과과정은 대인보상 의료연수 교육 중 상위단계에 속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인보상 실무과정, 의료연수초급과정, 의료연수중급과정 등을 모두 이수한 직원들이 교육 대상이 된다. 직원들은 의료연수 초급, 중급과정을 통해 배상의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의 이른바 메이저 과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함양한 후 의료연수특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금번 의료연수특과과정에서 강의가 진행된 정신과, 한의학과, 안과, 복부외상, 치과, 이비인후과의 의료과목들은 배상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 비해 높지는 않지만, 대인 보상업무가 나날이 세밀화 되어 가고 피해자 보상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 비중이 날로 무거워지고 있

는 의료 과목들이다. 따라서 동 과목들에 대한 의료지식이 실무에 적용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업무를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지식 함양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고자 5개 육운공제 단체가 보험연수원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매년 동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제조합만을 위한 특별과정으로써 참여한 직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강사들은 일선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전문의들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외에도 실무적용 사례를 교육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며,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공제조합의 직원이라는 공통된 소속감을 바탕으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편한 동료처럼 서로를 대하며, 각자 실무를 진행하며 느꼈던 다양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토론 시간을 통해 나눴으며, 강의 중간중간의 쉬는 시간에도 강의 시간 중 이해를 못하였거나 놓친 부분들을 옆 동료에게 묻고 설명하며 화기애애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 5개 육운 공제 단체와 보험연수원과 합동으로 정신과, 한의학과, 복부외상, 치과, 이비인후과의 의료과목 강의를 듣고 있다.

교육일정 내내 보여주었다.

3일의 교육과정이 모두 종료된 후 대부분의 교육 참가자들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료연수특과과정의 교육과목으로 진행된 정신과, 안과 등의 교육과정이 보다 많이 개설되고 또한 보다 많은 공제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들이었다.

이번 교육과정을 취재하는 내내 우리 공제조합 직원들 뿐 아니라 타 공제조합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3일의 시간동안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짧은 3일의 일정이었지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개인택시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육운공제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며 교육장을 나섰다.



차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SM5의 변화를 만나보세요

New SM5 Platinum 탄생

▶감각적인 럭셔리 스타일로 품격이 업그레이드됩니다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이 숨은 위험까지 알려줍니다 ▶Smart Connect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간편해집니다

▶스마트 ECO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친환경 드라이브가 가능해집니다 ▶프리미엄 나파시트로 실내가 더 특별해집니다 ▶BOSE® 사운드 시스템이 완벽한 감동을 전합니다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New SM5 2.0 CVT II 엔진 :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15kg, 무연연비(가), 연비 14.1km/l, CO2배출량 166g/km, 2등급 - New SM5 2.0 CVT II LPL* 엔진 : 배기량 1998cc, 공차중량 1470kg, 무연연비(가), 연비 10.0km/l, CO2배출량 176g/km,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용연비(연비)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월별 (080-300-3000 / 02-300-3000)나 가까운 지점 및 홈페이지(www.renaultsamsung.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COPYRIGHT © 2013 RENAULT SAMSUNG MOTORS

컴퓨터 보안 및 자가진단 방법



1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설정

컴퓨터 부팅시 윈도우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컴퓨터를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없을 경우 누구나 쉽게 컴퓨터에 접근하여 중요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 설정방법 : 컴퓨터 하단 왼쪽에 윈도우창을 클릭 제어판 → 사용자계정 → 계정 및 암호 설정

2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 업데이트는 컴퓨터 작동 방식을 향상시키거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제어판 → Windows Update - 업데이트 설치

3 윈도우 방화벽 설정

윈도우 방화벽은 해커나 악성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합니다.

사용자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악성 소프트웨어를 보내지 못하도록 방지 합니다.

◎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 Windows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 홈 또는 회사(개인) 네트워크 위치 설정 / 공용 네트워크 위치 설정 → Windows 방화벽 사용 선택

4 화면보호기 설정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부재중에도 중요 문서 및 자료를 타인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화면 보호기 대기시간을 설정 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제어판 → 개인설정 → 화면보호기 → 대기시간 선택

5 백신 사용

신뢰할 수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구입

하여 설치 사용 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백신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검사를 통해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무료 백신은 각종 악성코드 및 해킹, 톨바설치 등 기타 부작용을 발생시키므로, 무료 프로그램들은 삭제 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제거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6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 사용하기 바랍니다.

7 메일 및 메시지를 통한 파일 다운로드 및 USB메모리 사용시 바이러스 검사

신뢰할 수 없는 메일이나 타인의 USB메모리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를 받거나, USB를 사용시 바이러스 검사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든든한 첫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Q&A

자영업자도 최대 18일까지 실업급여

일반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출 부진 등으로 가게 문을 닫게 되어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용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실업급여와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장님의 든든한 첫 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Q1.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 첫째,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 둘째, 자영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영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의 100%(음식, 서비스직종의 경우 60%), 1인당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한 훈련수당도 (3시간 미만 9천원/일, 3시간 이상 18천원/일 단위로) 지원된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해당자는 훈련비용의 50~80%,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장려금(월 11만6000원)도 지원된다.

Q2. 가입대상이나 가입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이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Q3. 월 보험료는 얼마이고,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 선택한 기준보수액(월)에 따라 결정된다. 기준보수액(월)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5개 등급 중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 피보험기간으로 산정됨

Q4. 자영업업을 하다가 바로 취업을 하면 손해일 것 같은데...?

☞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을 합산한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가입한 보험기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Q5. 가입신청 및 문의사항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등급	기준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540,000원	34,650원	770,000원
2등급	1,730,000원	38,920원	865,000원
3등급	1,920,000원	43,200원	960,000원
4등급	2,110,000원	47,470원	1,055,000원
5등급	2,310,000원	51,970원	1,155,000원

1

든든한

사장님의 첫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장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에게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가입은 언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 1350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www.kcomwel.or.kr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통사고율 **1%** 줄이기

1. 전좌석 안전띠 매기
2. 운전·보행 중 스마트폰·DMB 사용 안하기
3. 생활도로 서행운전 좌·우 확인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데스크칼럼

택시 특단의 대책 세워야

백약이 무효라는 속담이 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쓰이는 말이다. 택시의 현실이 그렇다. 택시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결이 난망할 것이다.

택시업계의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업계 추산 약 20%인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이다. 과잉공급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면허남발이 주요인으로 그동안 누누이 거론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치 않겠다.

지난해 1월 제정된 택시발전법은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법의 제정목적의 핵심은 재정지원이다.

그런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감차되는 차 한 대당 1천300만원을 감차보상금으로 책정하였다. 우려했던 바 대로 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실거래가는 7,000만~8,000만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보상금 1천 300만원을 제외한 약 6,000여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효성이 크게 의심된다.

택시발전법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택시 감차 보상 재원 확보를 위해 LPG 부가가치세 면제가 필요하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달리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과 차량유지비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면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에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운수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감차보상금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택시는 버스, 지하철과 함께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공공 수송 분담율도 37.4%로 버스(56.5%)와대등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가보조금지원만으로는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영난 해소 및 택시운송종사자의 경제적 여건 개선에 한계가 있어 개인택시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개인택시 차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택시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한정된 차종(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으로는 승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없다.

관광객, 단체 승객 등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한, 승합택시 도입이 필요

하다.

서두에 택시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난마와 같이 얽혀 있는 택시문제를 언제까지 방기하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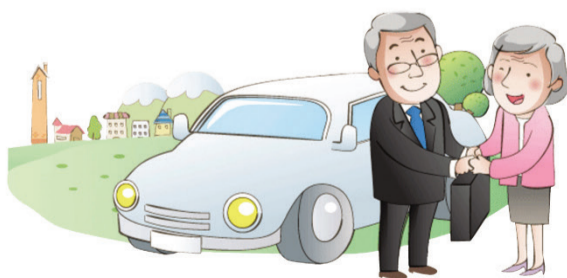
우리 택시업계도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미스러운 행동 등 승객에 불편을 주는 모든 행동을 지향하고 사랑 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택시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홍보·지도차장
김도길



어르신 안전하십니까?

어르신 보호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주름을 만드는 것은 세월 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있게 하고
우리를 키워낸 사람, 어르신

잠시 기다려 주는 여유와 배려하는 마음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거리를 만듭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동호회 탐방 인천조합 운전기사 선교회

독거노인 돌보고 밥차 무료급식 봉사하는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

“나눔의 기쁨이 더 커 우리가 행복해요.”

선교회원들 축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취미에 따라 운동 하면서 체력 단련한다



인천조합 수조 조합원으로 구성된 ‘운전기사 선교회’ 회원들은 열악한 운송여건으로 돈벌이가 넉넉치 않는 환경에서도 사랑으로 봉사를 실천 ‘나눔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인천조합에 운전기사 선교회 (회장 전병조)가 창립된 것은 1986년이다. 기독교를 믿는 조합원 12명이 모여 선교회를 창립했다. 초창기에는 남을 돕는 봉사 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회원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친목단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활동 범위도 불우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넓혀졌다.

운전기사 선교회는 선교회 창립 목표를 ▲ 운전기사의 복음화에 관한 사업 ▲ 승객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 ▲ 장애인 돕기 ▲ 독거노인 돕기 ▲ 외국인 근로자 선교사업 ▲ 회원간의 복지 사업 등으로 신앙과 복지 사업을 아우르는 범위로 확대하고 실천에 옮겼다.

신앙을 뛰어 넘어 복지까지 활동범위가 넓혀지면서 12명으로 출범한 회원수가 2000년에는 매월 2만원씩 회비를 내는 정회원이 126명으로 크게 늘었다.

◆ 월회비로 선교회 운영

대가족으로 불어난 운전기사 선교회 운영은 회원

들이 월 2만원씩 내는 회비로 한다.

회비는 회원들의 체육활동과 선교활동지원, 회식비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쓰임새를 절약, 회비 2만원 중 5천원을 복지예산으로 편성 년 2회씩 시행하는 독거노인 여행경비로 충당한다.

선교회는 1년에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독거 노인 1백명씩을 선발, 여행을 시켜드린다.

회원들이 제공하는 35대의 택시에 나눠타고 떠나는 자동차 여행은 회원들도 대거 참여하여 독거노인과 함께 타고 오순도순 차중에서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순간 어르신들에게 쌓였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가족 여행으로 하루를 즐긴다.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은 1회성 여행에 끝나지 않는다. 회원들이 수시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환담하기도 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찾아 수리해주는 노력 봉사도 한다.

또한 매주 수조 휴일인 수요일에는 교대로 주안역을 찾아 4시간씩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인천 아시아 게임 때 자매결연을 맺은 필리핀 선수를 응해준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다문화 가족을 돕는 활동도 계속한다.

“회원들 모두가 기독교 신자들이어서 신앙심을 바탕으로 깔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회원간의 친

목을 다지고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때보다 운송수입 환경이 어려운 때라 내핍 생활을 하는 처지인데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노력봉사와 물질로 섬기는 사랑에 회원들이 흔쾌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느낍니다.” 부평교회에서 장로직분을 맡고 있는 전병조 회장의 설명이다.

인천 선교회원들은 축구,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취미에 따라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단련한다. 예배를 통해 신앙심을 키우고 나눔의 봉사를 하면서 행복을 키운다. 인천 운전기사 선교회는 회원의 증가로 선교회가 대영화 되면서 회원들의 수입창출도 시도하고 있다.

6개월전부터 시범적으로 15대의 임원들의 차량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별 광고판을 차량 내부에 비치하고 승객들을 상대로 광고를 한다.

아직은 시험단계에서 무료 광고를 하고 있지만 광고 효과가 나타나면 유료광고로 전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운전기사 선교회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 전병조 ▲ 총무이사 : 김진택
▲ 이사 : 김장수, 구우회, 김창환, 배중안, 이경근
이강해, 김금용

※ 문의전화 : 총무이사 김진택 (010-8511-4057)

(글·이진영 기자)



건강상식

피로한 당신에게 적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를 말한다. 만약 원인과 관계없이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면 '만성피로'라고 한다.

흔한 피로 증상은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며 무기력을 느끼는 경우이다. 현대인들이 피로를 느끼는 것은 흔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증상이다.

피로는 몸의 이상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무리를 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해 집중장애, 망각, 활력 감소, 판단력 저하, 짜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은?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불안증, 수면장애, 사회생활 부적응 등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피로를 느낄 수 있으며, 암, 결핵, 당뇨병, 간 질환, 갑상선 기능항진증, 심부전증, 빈혈 등의 신체질환에 의해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일이 불규칙하고 과중할 때 피로감은 심해진다. 여성들의 경우 육아나 가사노동으로 인해 만성피로를 느낄 수도 있다. 만약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질병일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질병

의 진행에 따라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게 된다.

피로감이 느껴지면 일단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소 카페인이나 알코올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을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목욕은 근육 이완,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부신 기능을 촉진해 피로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을 적절히 먹는 것도 중요하다.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을 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니 일반식품과 구별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

리기능을 활성화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은 심장기능을 보호하고 라디칼에 의해서 유발되는 과산화와 신경세포 내 과량의 칼슘 유입을 막아줌으로써 신경보호 작용을 한다. 이러한 심장보호 및 신경보호 작용으로 피로해소 효과가 나타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인삼'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 증가되는 혈중 카테콜아민 농도를 적당하게 조절함으로써 항 스트레스 효과를 나타내며, '구연산'이란 성분은 인체에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대사되는 과정에서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 ▲ 인정된 기능성 원료
발효생성아미노산복합물, 홍경천추출물
- ▲ 고시형 원료
인삼, 홍삼, 매실추출물

♣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기사출처 · 하이닥 (www.hidoc.co.kr)〉



- 1 건강기능식품을 사기 전에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임산부, 수유부 여성이거나 만성 질환자는 현재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이다.
- 2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두 가지 이상 섭취하거나 약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 3 수술 등 중요한 치료나 의료 처치 이전에 의사에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려야 하며 수술 2~3주 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와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5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며,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량을 준수한다. 과량 섭취해도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튼튼한

사장님의 첫번째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장님도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사장님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